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대북 농업협력

임 을 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eulclim@hanmail.net

1. 한반도 신경제구상: 비전과 핵심정책
2.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전략과 과제
3.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과 대북 농업협력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대북 농업협력

1. 한반도 신경제구상 : 비전과 핵심정책¹⁾

1) 비전 : 한반도 경제통일과 북방경제시대 개막

- 문재인 정부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경제위기 속에서 성장 동력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우리에게 경제활동 영역의 확장은 아주 시급한 과제로 인식한다.
-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결국 남북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
- 정치적 통일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남북은 먼저 경제 공동체를 이뤄야 잘 살 수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대북정책의 핵심으로서 남북경협과 동북아경협의 비전과 방향을 담고 있다.
- 이 구상은 분단으로 육지속의 섬처럼 갇혀 있는 우리 경제의 영역을 북한으로, 대륙으로 확장하여 대한민국 경제 활로를 개척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고, 이를 토대로 동북아 평화 정착과 공동번영을 달성하자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비전이자 경제비전으로 평가된다.
- 한반도가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 문 대통령은 지난 2015년 8월 15일 민주당 대표시절 이 구상을 처음 발표하면서 광복 100년을 맞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꿈이라고 표현했다.
- 우리는 대륙과의 협력을 통해 남북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 문 대통령은 베를린 연설에서 "군사분계선으로 단절된 남북을 경제벨트로 새롭게 잇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룰 것이다."

1) 임을출, "새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전략은?" 『도발과 제재의 악순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제12차 통일한국포럼, 평화문제연구소·한스자이델재단 주최, 2017년 8월 16일, pp.37-47; 임을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이행전략," 『비핵평화번영을 위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통일연구원 주최 학술회의, 2017년 9월 19일, pp.39-51; 임을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의의와 과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전략』, 제34차 세종국가전략포럼, 2017년 10월 19일, pp.91-106.

4 신 남북협력시대의 도래 농업협력의 길

- 끊겼던 남북 철도는 다시 이어져 부산과 목포에서 출발한 열차가 평양과 북경으로, 러시아와 유럽으로 달릴 것이다.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동북아 협력 사업들도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 핵심 정책과 목표

□ 핵심정책 : 3대 경제·평화벨트와 '하나의 시장'을 위한 협력

○ 이 구상은 4대 핵심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 즉 환동해·환황(서)해·접경지역 개발을 통한 한반도 균형발전과 북방경제와의 연계 강화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3대 경제·평화벨트 구상을 비롯해 남북한 상품 및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점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남북한 주민 전체의 후생을 증진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는 '하나의 시장협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 단기적으로 북한 내부의 시장화를 촉진하고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 전역 시장과의 연계성을 강화, 중장기적으로 소비재 및 생산요소 시장통합을 지향하고 있다.

- 3대 경제·평화벨트 구상에는 △금강산, 원산(관광), 단천(자원), 청진, 나선지역(산업단지, 물류인프라)의 남북 공동개발을 통한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구축', △수도권(서울-인천-해주-개성), 개성공단, 평양·남포·신의주 연결 서해안경협벨트 건설 및 경의선 개보수, 서울-베이징 고속교통망 건설 등 '서해권 산업·물류·교통벨트 건설', △설악산·금강산·원산·백두산 관광벨트 구축 및 DMZ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 개발 등이 구체적인 실천과제들로서 포함되어 있다.

○ 첫째, 환동해 경제벨트는 동해 연안을 중심으로 관광·교통·에너지·자원 벨트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 금강산과 평창을 포함한 설악산 지역과 원산을 잇는 국제관광협력 사업, 나진-하산 복합물류 사업, 단천 자원개발협력, 남·북·러 3각 에너지협력사업 등이 포괄되어 있다.

- 금강산관광은 우리가 이미 경험해본 사업이며 단천 자원개발도 과거에 초기 단계 협력에 성공한 사례에 속한다. 나진-하산 복합물류 사업은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시행하다가 북한의 핵실험으로 중단된 바 있다.

- 따라서 정치안보적 상황이 개선되면 재개가 가능한 사업들이다. 이전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라도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사업들은 계승, 발전시킬 계획이다.

○ 둘째, 환황해 경제벨트는 수도권, 개성공단, 해주, 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산업·물류·교통 벨트를 만들자는 것이다.

- 여기에는 경의선 개·보수 사업, 신경의선 고속도로 건설,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건설 등 교통인프라 건설 사업이 해당된다.
- 게다가 개성공단 재가동, 제2의 개성공단 건설, 서해 평화경제지대 조성,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서해 복합물류네트워크에다 중국의 도시들을 연결하는 환서해물류망을 구축하자는 구상이다.
- 셋째, 한강 하구부터 DMZ를 가로지르는 경기 북부 접경지역을 생태·환경·평화·관광 벨트로 만들자는 구상이다.
- 박근혜 정부에서도 DMZ평화생태공원 프로젝트가 추진되었지만 남북관계 악화로 인해 결실을 거두지 못한 사례가 있지만 접경지역 평화벨트 사업은 낙후된 경기 북부 지역과 강원도 접경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다.
- 더구나 이 지역들은 생태 및 역사관광 잠재력도 풍부하다. 평화안보 관광도 얼마든지 수요가 있다. DMZ 주변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신뢰구축조치가 만들어진다면 남북공동시장을 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그동안 북한 내부에서 시장이 크게 확산되어 왔다. 시장을 매개로 남북경제를 통합하는 방향의 경험도 모색해야 한다.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하는 방향에서 남북경협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우선 과거에 활발하게 추진하면서 긍정적 성과를 보여준 바 있는 소비재 중심의 위탁가공교역을 재개해야 한다. 북한 내 생필품 생산 공장에 대한 기술·설비·원료를 지원하고 공동으로 자원을 개발하는 협력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남북이 점진적으로 경협의 범위와 대상을 넓혀가다 보면 당연히 중국 동북 지역과 극동 러시아와의 경제적 연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결합하여 지역 전체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꾀할 수 있게 된다.
- 분단된 남북을 경제로 잇고, 하나로 된 한반도경제가 북방으로 뻗어 나가 유라시아 경제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요약하면,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동과 서, 그리고 동서를 잇는 이른바 'H 경제 벨트'를 조성해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한이 도로, 철도, 통신을 연결하고, 시장과 제도를 통합하는 경제통일을 이룬다는 비전을 품고 있다.

6 신 남북협력시대의 도래 농업협력의 길

- 동해권에는 금강산에서 러시아까지 이어지는 관광, 에너지·자원 중심의 경험벨트를, 서해안에는 남쪽의 수도권에서 신의주까지 올라가는 제조, 물류, 교통중심의 경험벨트를 조성하고, 비무장지대(DMZ)는 환경·관광협력 중심의 경험벨트로 꾸려 이른바 남북 경제협력 'H 벨트'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 낙후된 남북 접경 지역을 통일경제특구로 만들어 평화와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고, 더불어 남북 공동어로 구역이나 평화 수역 등을 포함하는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조성할 수 있다.
-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해 여건이 조성될 경우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추진된다.

그림 1. 한반도신경제 구상도



□ 핵심 목표

-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남북관계 개선과 경협 활성화를 통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목표를 담고 있다.
 -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한반도 모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대한민국의 국가적 생존과 미래 한반도의 번영을 위해 북한의 지경학적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해 남북한의 상호보완적인 분업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창출되는 새로운 가능성을 통해 한국 경제가 직면한 일자리 부족, 인구 노령화, 저출산, 성장 동력 상실 등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한다.
- 아울러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견인하여 점진적으로 국제사회에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받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을 기여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 경제를 매개로 북한을 변화의 길로 나서도록 하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정상적인 발전 경로를 선택하도록 견인하는 남북경협을 정교하게 기획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방적 지원을 넘어 북한의 시장화와 개방화를 지원하고 북한의 경제체제 전환을 견인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것이다.
- 끊어진 남북 경제의 맥을 다시 연결하여 하나의 경제시장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사실상의 경제통합을 실현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이다.
 - 궁극적으로 남북 간 교통망·에너지망 연결과 산업경제벨트 구축 등을 통해 경제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하나의 생활·문화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 남북한과 동북아가 동반 성장하기 위하여 역내국가간 산업·인프라를 공유하고, 투자와 이익을 공유하려는 초국경적 협력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다.
 - 북한과 중·일·러를 포함하는 환황해, 환동해 신산업벨트 및 북방·접경 신산업벨트를 조성하여 한반도를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 발전시킬 수가 있다.
 -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경제공동체 형성을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의 허브로 개발하는 것이다.
 - 남북한의 경제통합 진전은 내수 시장을 확대하고, 동북아 유통망을 통해 유라시아

8 신 남북협력시대의 도래 농업협력의 길

대륙과 직접 연결되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한반도를 동북아 경제중심지, 물류중심지로 발전시킬 수 있다.

- 또한 동북아 차원의 물류와 에너지 망이 구축될 경우 북방대륙으로의 연계망 구축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
-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해 의미 있는 수준의 이익 창출을 도모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변 국가들과 비전을 공유하고 경제교류의 혜택을 나누면서 동북아 전체의 경제협력 수준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대체할 수 있는 경제교류협력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응집된 에너지를 동북아 각 나라의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꼭 막힌 남북관계를 뚫어나감과 동시에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공간적 활로도 모색해보자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2.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전략과 과제

-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은 남북 간의 기존합의를 이행하는 것이다.
- 이와 관련해 가장 주목해야 할 합의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된 10.4 합의이다.
- 이 합의 이행문제는 2018년 4월 27일 문재인-김정은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판문점 선언 제1조 6항에서 재확인되었다.
- 즉,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나감에,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 나아가 남북 정상은 세 번째 회담에서 도출된 9월 평양공동선언문에서도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 이 선언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2조 ① 항 즉, 남과 북은 금년 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한 부분이다.

- 그리고 ② 항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한 부분도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의 중요한 걸음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개성공단과 서해경제공동특구와 금강산과 동해관광공동특구는 앞으로 환서해경제권과 환동해경제권의 핵심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 두 번째 중요하게 다뤄지는 추진전략은 능동적인 경협추진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 수동적으로 경협 재개의 시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조치들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큰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협력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 마련에 보다 능동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는 것이다.
- 세 번째 전략은 북핵 협상과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안보와 경제의 유연한 연계'를 추구하는 것이다.
 - 북핵 문제가 단계적으로 진전되는 상황에 맞춰 추진하되, 점차 신뢰를 쌓아 가면서 평화-안보-경제가 선순환되는 관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 경제협력 사업을 매개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면서도 남북 간 상호 갈등을 완화하고 평화공존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 다만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제재 조치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도적 지원사업과 경협은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네 번째 전략은 시장협력과 경제벨트 및 부문별 사업의 상호 연계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 북한 시장화 촉진과 관련한 핵심 고리인 소비-유통-생산(공급)과정에서의 우리 측의 역할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북한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상당수가 수입품임을 감안 우선 남북 교역(위탁가공 교역 포함)을 통해 한국산 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북한 경제특구·개발구 진출을 통해 북한 내 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 우선적으로 철도·도로 등 육로 물류교통망 개설과 함께 통신 등 인프라 연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경제벨트간 연계, 산업단지와 물류·교통·관광 등의 연계 개발을 추진한다.

10 신 남북협력시대의 도래 농업협력의 길

- 북한 인프라 구축계획은 각 분야별로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철도, 도로, 가스, 전력망 등 교통·통신·에너지 등의 인프라를 복합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 다음으로 중요한 추진전략은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협력지역과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산하는 것이다.
-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 모델인 '점(특구, 개발구 중심)→선(기반시설, 철도도로통신 연결)→면(경제산업벨트 조성) 확대'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다.
- 이 과정에서 자본주의 생산·소비양식, 시장질서, 사회문화생활양식의 확산이 이뤄지게 하고, 중장기적으로 남북 협력지역을 글로벌 교류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다.
- 인프라 건설 등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과제이기 때문에 민생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 국제정세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북핵 문제 해결이나 민생, 인도적 차원의 사업은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삼림, 보건의료, 환경, 자연재해방지 분야 등 보편적으로 수용이 가능한 사업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적 차원의 인권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이기도 하다.
- 식량난, 전염병, 전력난 등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남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의 사업들이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초기 이행 단계에서는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
-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남북경협을 단계적 확대를 통한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견인을 위한 전략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남북관계 발전, 국민적 동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색→재개→본격화」 순으로 단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다.
- 모색단계에서는 삼림, 철도도로 연결, 전염병 예방 등 국제제재와 상충되지 않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재개 단계에서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사업 등 기존 경협사업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 본격화 단계에서는 높은 수준의 제재 완화를 전제로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다.
-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기본적으로 주변 국가들의 경제발전 전략에 적극 호응하면서 역내 국가들간 다양한 방식의 양자, 다자간 교류협력을 추진해야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

- 그래서 우선적으로 중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 중인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사업들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 구체적으로 인프라 및 산업협력 분야에서 주요 건설 프로젝트의 우리기업 공동참여, 유라시아 횡단철도 등 물류망, 전자상거래 및 통관원활화 정책을 활용한 내륙지역 진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중국의 일대일로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이 만나는 환동해권에서 우선적으로 관광, 물류 및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시작할 수 있다.
 - 예를 들면 중국은 훈춘, 투먼, 단둥, 러시아의 자루비노항 그리고 북한 내 나진과 청진을 연결하는 환동해물류센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북아지역에서 강력한 물류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이곳에 한국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 러시아는 낙후된 극동지역을 개발하고 한반도를 교두보로 아시아-태평양 진출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대외진출 전략인 新동방정책을 추진해왔다.
 - 러시아 극동지역은 에너지원이 부족한 한국·중국·일본에게는 매력적인 시장이며 현지 주민들의 소득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어, 한국, 중국, 일본의 상품진출 각축전이 전개되고 있기도 하다.
 -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핵심 축인 환동해권 경제권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므로, 푸틴 대통령의 신동방정책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의 디딤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특히 러시아는 이른바 3통 사업(송전망, 가스관, 철도연결)에 상당한 이행 의지를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 러시아 신동방정책은 극동지역을 아시아 지역을 향한 에너지 수출 거점으로 삼고 물류 루트 중심지로 키운다는 복안. 기업과 투자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선도개발지역'과 '자유항(Free port)'을 지정해 놓고 있다.
- 중·몽·러 경제회랑과의 점점 모색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최근 중국, 러시아, 몽골이 합의하여 추진 중인 중·몽·러 경제회랑과의 접점을 찾아 한반도와 동북아를 연계하는 산업·인프라 협력이 요구된다.
- 중국은 新유라시아 대륙교(몽골-중국-러시아 3자 경제회랑) 건설을 통해 국가와 지역을 초월한 인프라 연계건설을 추진하여 중요한 단계적 성과를 확보해놓고 있다.

12 신 남북협력시대의 도래 농업협력의 길

- 한반도와 동북3성, 극동 연해주 지역을 통과하는 동북아경제회랑을 한국 주도로 만들고 이를 중국-몽골-러시아로 향하는 회랑과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중·몽·러 경제회랑은 일대일로 6대 경제회랑 가운데 하나로서 교통인프라, 통상구 건설 및 세관·검역관리, 생산능력(산업) 및 투자협력, 경제무역협력, 인문교류, 생태 환경 보호, 지방 및 접경지역 협력 등 7개 분야 총 32개 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무엇보다 새로운 남북경협 방식의 모색을 요구하고 있다. 남북 관계 경색이 장기간 지속되는 동안 북한 내부의 시장화가 크게 심화되었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괄목할 만한 발전도 고려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남북경협이 추진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 지난 9년 동안 남북경협이 중단되면서 경협환경이 크게 변화한 것이다. 특히 북한의 시장화 진전, 과학기술 발전 수준 등 내부 변화 상황을 고려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 북한 측은 우리 측 민간기업인 등을 만나 자신들의 경제가 이전보다 발전했고, 현대적 기술습득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주민들의 달라진 눈높이에 맞는 협력사업 추진을 제안하고 있는 실정이다.
- 앞으로의 경협방식은 생산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 남북한이 갖고 있는 다양한 요소를 혁신적 방법과 새로운 발상을 통해 결합,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면 남북한 동반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 북한의 관광자원과 남한의 서비스업 경험을 접목한 새로운 차원의 관광산업 진흥 등도 적극 도모할 가치가 있다. 남한에서 필요로 하는 혁신의 실험, 새로운 기술의 적용, 신기술 인프라의 구축 등 테스트베드(test bed)로서 북한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시도해볼 만하다.
- 신약 개발, 드론·무인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 핵심이 될 기술들의 개발 및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북한을 활용해야 한다.
- 남북 호혜적 경제협력 강화 차원에서 공동으로 자원분야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 북한 강·하천, 산림, 수산자원 복구 및 복원 지원 사업에서 출발해, 점진적으로 경협사업으로 발전시켜 주민들의 민생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 이와 함께 경제협력의 참여주체 다양화, 민·관 경협 거버넌스 강화, 북한 내 시장 확산 등 변화 양상을 반영해 시장 원리에 기반한 민간 주도의 남북경협 심화를 추구하고, 정부는 제도·인프라 지원을 통해 안정적 경협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이 모든 노력들이 합쳐져야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실현을 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3.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과 대북 농업협력 : 새로운 변화, 새로운 대응

- 농업협력은 환서해, 환동해, 접경지역, 하나의 시장협력 모두를 관통하는 이슈 (cross-cutting issue)이다.
 - 농업협력은 한반도 식량안보 확보라는 중장기적 목표를 세우고, 단기적으로는 식량 부문에서의 공동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병행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협력 방식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는 북한 측 수요와 우리 측 수요의 점점 모색, 산업 구조 조정의 가능성,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취지를 살려 남북한 차원의 농업협력이 동북아 차원의 협력으로 확대 발전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전망을 갖고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
 -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근본 취지가 어느 한쪽의 편향적인 발전이 아니라, 남북한이 함께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즉 남북농업협력이 지속가능성을 갖기 위해서는 남측의 미래 먹거리 창출, 생산기반 확충 및 소득증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향후 남북농업협력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긴밀한 연계를 맺으면서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농업생산성 증대 방안 모색, 북한 경제개발정책과 연계,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가와 농업 공동협력사업 가능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마지막으로 강조할 대목은 김정은 정권의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이라는 새로운 노선 아래 북한의 농업정책과 추진방향의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 김정은 시대의 농업정책의 새로운 경향은 농업의 과학화와 현대화이다. 김정은 체제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이데올로기와 정책방향은 자강력제일주의와 과학기술 중시이다.

14 신 남북협력시대의 도래 농업협력의 길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7년 신년사에서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정식화한 '자강력제일주의'에 기초해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 전진을 다그치자"를 핵심구호로 내세웠다.
- 이를 뒷받침하듯 내각 수반인 박봉주 총리는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5개년전략목표를 기어이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오늘날 북한은 기본적으로 자강력 제일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이 자립경제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강화하는 경제개발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 김정은 위원장은 2017년 신년사에서 과학기술을 농업과 산업 분야에 적용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 "경제 강국 건설의 주타격 전방인 농업 전선에서 과학농사 열풍을 일으키고 다수확 운동을 힘 있게 벌려야(벌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 북한에서 농업은 인민생활 향상 목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7차 당대회에서 목표로 내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기간(2016-2020) 동안 농산, 축산, 수산을 3대 축으로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며, 경공업발전 강화로 소비품 문제의 기본적 해결로 인민생활향상에 결정적 전환을 이루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 이와 관련해, 두벌농사와 겹재배방법 도입을 통한 토지이용률을 1.5배 이상 높여 올곡식생산을 끌어올리며, 축산부문에서 집집승 종자와 먹이문제 해결로 세포지구 축산기지 등 정상운영과 함께 협동농장의 공동축산과 농촌세대의 개인축산을 발전시켜 고기생산을 늘이기로 했다.
- 농업, 량정, 수산부문 회의에서는 전략수행기간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끌어올리고 량곡수매사업을 개선하여 식량문제를 해결하면서 남새와 축산물, 과일생산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문제가 강조되었다.
- 유기농법을 장려하고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한데 대한 당의 방침을 일관성 있게 관철하며 가까운 앞날에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은 수준에 올려 세우기 위한 문제들도 논의되었다.
- 결국 농업의 현대화, 과학화, 기계화를 통해 식량의 자급자족을 실현하고자 하고 있으며,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농업발전을 지향하면서 식량생산을 지속적으로 늘이며 농업을 세계 선진 수준에 올려놓고자 한다.
- 지난 4월 20일 평양에서 개최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은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이라는 새로운 노선을 발표하였고, 이후 북한 매체는 "회의 이후 북한 전역에 '과학농법 열풍'이 불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따라 최근 북한에서는 효능 높은 살충제 개발과 대량의 식량작물 품종 재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 축산품·과일·야채온실·식용버섯 등의 생산량 증가를 위한 연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학농사의 내용들은 이렇다.
 - 우량품종들을 더 많이 육종하며 지방별, 품종별 수요에 맞게 종자생산을 한다.
 - 지대적 특성과 자연기후조건에 맞게 작물과 품종배치를 바로하고 농작물비배관리에 서 과학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선진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인다.
 - 유기농법을 장려하고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과수업의 집약화, 과학화 수준을 높여 과일생산을 늘이며 전국 도처에 건설한 남새온실과 버섯공장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들이 혜택을 보게 한다.
 -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빠른 기간에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60-70%수준에 올려 세우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 농기계공장들에서 설비와 생산 공정을 현대적으로 개선하고 능률 높은 농기계들과 부속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협동농장들마다 국산 농기계가 핵심 역할을 하게 만든다. 협동농장들에서 농기계의 가동률을 높이고 영농공정의 기계화를 대폭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 들어 3번째 중국을 방문한 지난 6월 20일 베이징에 있는 농업과학원(베이징 국가농업과학기술혁신원)을 방문한 것은 그의 농업과학화, 현대화 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 이곳은 지난 5월 중국을 방문한 전국 시·도당 위원장으로 구성된 북한 노동당 ‘친선 참관단’이 방문한 곳이다.
 - 친선참관단은 ▲작물 재배 ▲채소 품종의 다양화 ▲화초 경관 조성 디자인 ▲생물학적 방제 ▲친환경적 안전 생산 ▲감자 품종 ▲감자 주식화 식품 등 농업 과학기술 분야의 성과를 확인했다. 이어 과학원에 위치한 ▲스마트 제어 ▲LED 식물공장 ▲수경재배 ▲입체화 양액재배 등 기술 및 응용 시범기지도 둘러봤다.
- 북한은 과학농법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학습하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 북한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먹고 사는 문제도 대담하고, 과격적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마디로 농업의 기계화와 정보화를 추진해 농업현대화에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우리 측이 구상하고 있는 향후 남북농업협력의 방식도 대담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